

매크로 COMMENT

미국 관세 리스크: 122 조 종료와 301 조의 부상

경제/FX. 신윤정 / yjshin@sks.co.kr / 3773-9943

Signal: 122 조 종료 이후 강제노동 301 조가 대체 관세 수단으로 부상

Key: 평균 관세율보다 고관세 기초 유지와 품목별 부담 재배분이 핵심

Step: 7월 공청회 이후 최종 세율·Annex A 범주·발효일 확인 필요

미국 관세 리스크를 다시 돌아볼 시점이다. 지난 2월 20일 I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Section 122를 발동해 임시 수입부가세를 부과했다. 다만 122 조는 150일 한도의 임시 조치이며, 의회 연장이 없다면 7월 24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7월 관세 이벤트의 핵심은 새로운 관세율 급등보다, 122조 종료 이후 관세 공백을 어떤 법적 수단으로 메울 수 있는지에 있다. 현재로서는 강제노동 Section 301이 가장 구체화된 대체 수단이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수입금지제도 미비를 각각 301조 조사 대상으로 올렸고, 이 중 7월 초 일정이 집중된 것은 60개 경제권 대상 강제노동 301조이다. 7월 6일 서면 의견 제출이 마감되고, 7월 7일부터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안 기준으로는 일부 경제권에 10%,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관세가 제안되어 있으며, 한국은 12.5%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제노동 301 조가 주목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법적·절차적으로 활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대체 수단이기 때문이다. USTR은 이미 60개 경제권의 관련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301 조는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를 포함한 공식 조사 절차를 거치는 만큼, IEPA보다 관세 부과의 법적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결국 7월 관세 이슈는 단순 일정이 아니라, 미국 관세정책이 122조에서 301조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국면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품목별 부담의 이동

강제노동 Section 301은 헤드라인상 새로운 관세처럼 보이지만, 평균 관세율 관점에서는 Section 122의 대체 수단에 가깝다. 301조가 122조 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22조를 대체하는 구조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추가적인 관세 충격보다 현행 고관세 기초의 법적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국의 무역가중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1.2%에서 11.0%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안정이 변동성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2조 하에서 관세를 부담하던 품목 중 일부는 Annex A 또는 기존 232조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301조에서 제외되는 반면, 비제외 품목은 한국 기준 12.5% 대상이 되면서 관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관세율 레벨의 추가 상승보다 품목별 net change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기존 Section 232 부담이 핵심이며, 강제노동 301 조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DRAM·NAND·HBM·일반 시스템반도체가 대체로 HTSUS 8542 계열에 해당하고, 해당 품목코드가 Annex A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타격 업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배터리, 일반기계, 일부 전기장비, 플라스틱·고무·화학, 섬유·의류 등 232와 Annex A에 걸리지 않는 비제외 제조업 품목은 12.5% 추가관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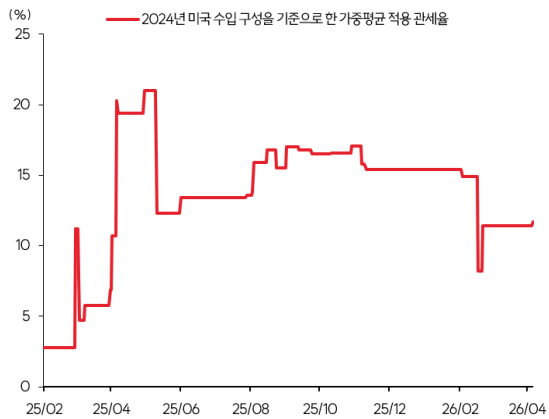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7월 관세 이벤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새롭게 급등시키는 이벤트라기보다, 기존 고관세 체제를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으로 유지·안정화하는 움직임에 가깝다. 평균 실효관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301조가 항구적인 수단인 만큼 기업의 가격 전가 압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비용 부담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총량보다 산업별 차별화가 중요하며, 반도체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비반도체 제조업 품목의 마진 압박은 구체화될 수 있다. 더불어 과잉생산능력 301조가 후행 발표될 경우 일부 면제 품목의 제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7월 24일은 관세 이벤트의 종료일이 아니라 다음 리스크를 확인하는 기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IEEPA 외 관세 부과 법적 권한

관세 부과 근거	내용	사전조사 필요 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
무역법 122조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	X	150일(의회 승인시 연장 가능)	15%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O (USTR 조사)	4년(이해관계자 요청시 연장가능)	X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O (상무부 조사)	X	X
관세법 338조	외국의 차별적 행위	X	X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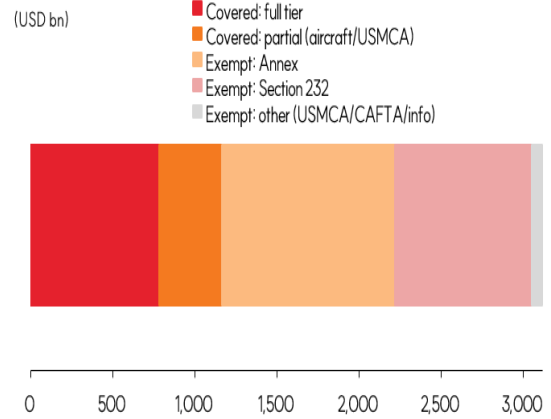
자료: KITA, SK 증권

미국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2024년 수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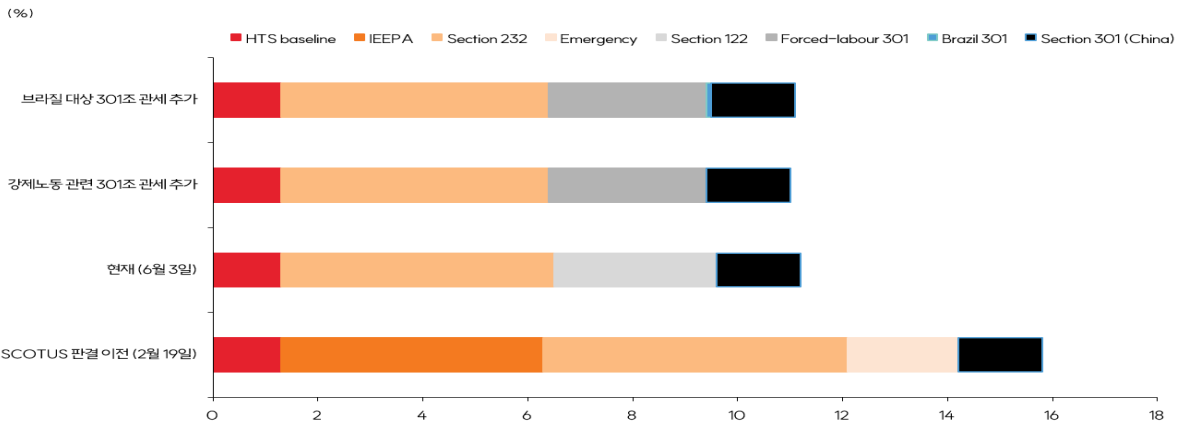
자료: TradeAlert, SK 증권

60 개 경제권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액(2024년)



자료: TradeAlert, SK 증권

미국 관세 수단별 무역 가중평균 실효 관세율



자료: TradeAlert, SK 증권

미국 301 조 부과시 산업별 영향 추정

산업	232조 커버	강제노동 301조	핵심 변화	추가 리스크 및 추가 내용
자동차·부품	✓ 25%	면제 확정	변화 없음	
철강·알루미늄	✓ 50%	면제 확정	변화 없음	
반도체 (DRAM·NAND·HBM·시스템반도체)	X	Annex A 명시 면제	122조 대비 관세 부담 완화	과잉생산능력 301조 조사 타겟
배터리·전기장비	X (조사 중)	12.5% 부과 예상	122조 대비 소폭 상승	232조 발효 시 301조 면제로 전환 가능, 과잉생산능력 301조 조사 타겟
일반기계·산업장비	X (조사 중)	12.5% 부과 예상	122조 대비 소폭 상승	232조 발효 시 301조 면제로 전환 가능, 과잉생산능력 301조 조사 타겟
디스플레이·광학기기	X	12.5% 부과 예상	122조 대비 소폭 상승	
플라스틱·화학	X	부분 면제	원료 일부 Annex A 가능, 완제품 12.5%	
의약품 (특허)	✓ 15% (7.31 발효 예정)	발효 후 면제		7월 31일 232조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부담 구조가 달라짐
에너지·정제유	X	Annex A 명시 면제	변화 없음	
섬유·의류	X	12.5% 부과 예상	122조 대비 소폭 상승	공정회 확정 사항 이후 일부 감세 가능

자료: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10월 15일 기준)

매수

91.98%

중립

8.02%

매도

0.00%